

국회 개헌특위 첫 회의부터 공방 치열

한국당 김재경 ‘합의정신’ 강조…정 의장 ‘속도전’ 주장

민주 “개헌 약속 지켜야” vs 한국 “국민열망 왜곡 말라”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개헌·정개혁위)는 15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으나 여야가 주요 쟁점에서 첨예하게 부딪치며 충돌해 향후 논의과정의 험로를 예고했다.

통상적으로 간단한 인사말만 주고받은 첫 회의에서부터 개헌 시기와 정부형태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은 것이다.

회의 시작부터 한국당 소속 김재경 특위 위원장은 ‘합의 정신’을,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 논의 속도전’을 각각 주장해 상당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먼저 모두 발언을 통해 “내용과 주제, 절차에 대한 합의는 개헌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적 조건”이라며 “개헌에 관심이 있는 모든 세력들은 정치적 합의만이 국민적 여망을 담보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곧바로 마이크를 잡은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가 헌법개정·정치개혁 통합 특위 구성에 합의한 것은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뜻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후 이어진 인사말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국회 개헌특위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개헌의 방향과 일정표를 제시했다는 게 한국당 의원들의 지적이다.

안상수 의원은 “문 대통령이 지방선거에서 합의하기 쉬운 부분부터 개헌하

고 합의하기 어려운 권력 구조는 차후에 할 수도 있을 것처럼 말했는데 본말이 전도됐다”며 “국민의 열망을 왜곡해서 이해하고 계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정종섭 의원은 “민주화 이후 모든 역대 정부가 실패하고 대통령도 불행한 길을 걸었다”며 “여당 의원들은 야당 시절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했는데 왜 지금은 침묵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성태(비례) 의원은 “개헌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주도해야 하는데 대

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가이드라인 제시는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받아쳤다.

박주민 의원은 “한국당은 탄핵 국면에서 신속하게 개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개헌특위가 집중적으로 논의하면 지방선거에서 개헌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인호 의원은 “대통령제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협치와 분권을 이룰 수 있는 대통령제로 가는 것이 생산적”이라며 “대통령제하에서 인사권·예산권을 어떻게 분산하고, 감사원의 독립 기관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관석 의원 역시 “개헌에 대해 논의만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이 신뢰를 할 수 있겠나. 결과를 내야 한다”며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실시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관영 의원은 민주당에 대해 “지난주 문 대통령의 발언을 가이드라인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국당에 대해서는 “대선 공약을 담아내야 한다. 한국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헌특위는 헌법개정소위 위원장으로 민주당 이인영 의원을, 정치개혁소위 위원장으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연합뉴스



1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위원장과 각당 간사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간사, 김재경 위원장, 자유한국당 주광덕·국민의당 김관영 간사.

/연합뉴스

서삼석, 민주 ‘해양수산특별위원장’ 선임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중앙당 상설특별위원회인 ‘해양수산특별위원장’에 김철민 의원(경기 안산시)을 공동 임명했다. 대부분 현역의원 위주의 위원장 임명 관행에 비추 볼 때 이번 서 위원장의 임명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서 위원장은 “해양수산 분야의 국가적 차원에서의 중요성은 말 할 것도 없고 전국 섬의 65%, 갯벌의 42%, 해안선



서지역민의 삶의 문제 또한 국가인권의 문제로 놓고 발전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jskim@kdaily.com

차관급 ‘평창 실무회담’ 의제 수두룩

방남 경로·체류비 부담 등 논의

남북이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해 17일 개최하기로 한 차관급 실무회담에서는 북측 방문단의 방남 경로, 체류비 부담 원칙, 개최식 공동임장 여부 등 논의해야 할 의제가 적지 않다.

우선 북측 방문단이 어떤 경로로 방남(訪南)할지가 관심사 중 하나다.

북한은 지난 9일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고위급 대표단과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태권도시범단, 참관단 등을 평창 올림픽 기간에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북측은 당시 방문단 규모를 400~500명 정도로 우리측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북측 방문단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상징성을 염두에 두고 육로 방남을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남쪽에서 열린 국제스포츠대회에 북한 선수단이 육로로 온 적은 없다. 선박을 이용하면 제재 위반 논란이 불가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육로를 이용하면 우선 평양에서 파주로 내려와 평창으로 가는 노선이 있다. 철도·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고 대규모 출·입경 시설이 있어 편리하다.

북측 선수단 등이 마식령스키장에서 발대식을 하고 올 경우엔 인근의 원산을 거쳐 동해안을 따라 내려올 수도 있다.

체류비 부담 원칙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고위급회담에서 북측이 평창동계 올림픽에 참가하고 남측이 필요한 편의를 보장하기로 합의했지만, 세부적인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여러 차례 의사를 밝힌 대로 북측 선수단의 참가비용은 부담할 수 있지만 나머지 방문단까지 도맡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문단의 숙소배정이나 안전 보장 문제 등도 논의돼야 한다. 정부는 북측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기대하면서 일부 속소를 준비해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北 “삼지연 관현악단 140명 예술단 파견”

“육로로 판문점 넘어 보내겠다”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삼지연 관현악단 140여 명으로 구성된 예술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또 북측 예술단은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을 진행하기로 했다.

남북은 15일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린 북한 예술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파견을 위한 실무접촉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5개항의 공동보도문에 합의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남북은 “북측 예술단의 공연 장소, 무대 조경, 필요한 설비, 기차 설치 등 실무적 문제들은 쌍방이 협의해 원만히 풀어나가도록 하고, 관련해 북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사전 점검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공동보도문을 전했다.

아울러 남측은 북측 예술단의 안전과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으며, 기타

실무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은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문서교환 방식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통일부는 이날 북측이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에 파견할 북한 예술단이 육로를 통해 판문점을 넘어 남측에 가게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측 예술단 파견을 위한 남북실무접촉” 결과를 설명하며 이렇게 밝혔다.

이 당국자는 ‘예술단의 방남 경로’를 묻자 “예술단 방남은 육로인 것으로 안다”고 말한 뒤 “판문점을 넘어 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이후 “북한이 육로로 방남하겠다고 요청한 것으로, 아직 합의된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을 정정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통합전대’ 대표당원 당규 개정

반대파 “정족수 채우려는 술책”

국민의당은 15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2·4 임시 전당대회’ 안건인 바른정당과의 합당 투표 자격과 관련, 그동안 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대표당원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기로 당규를 개정했다.

이를 두고 통합 반대파에서는 투표 참여 대상이 되는 대표당원의 전체 숫자를 줄여 의결 정족수를 더욱 쉽게 채우기 위한 술책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당규에 따르면 당원이 아닌 사람은 물론, 대표당원으로 선출된 이후 월 1천원 이상의 당비 납부 의무를 1년 이상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당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이번 전대에서는 그동안 1번이라도 당비를 낸 사람 가운데 통지를 받을 수 있는 당원의 경우 추가로 대표당원에 포함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대표당원이 된 뒤 한 차

레도 당비를 내지 않은 사람 혹은 당비를 냈더라도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당원의 경우 대표당원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국민의당은 또 이번 전당대회를 전국 각 시도당에서 분산해서 동시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인 인증을 통한 전자투표 방식도 도입할 수 있도록 당규를 개정했다.

이런 조치를 역시 대표당원들의 출석률을 높여 의결 정족수를 더 쉽게 채우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날 당무위에서는 전당대회 준

비에 필요한 당무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최고위원회에 일임하는 방안도 의결됐다.

일각에서는 최근 당무위에 대해 반대파의 반발이 심해지는 만큼 안 대표의 영향력이 더 강하게 미칠 수 있는 최고위에서 전대 준비를 주도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다만 이날 당무위에서는 쟁점으로 꼽혔던 이상돈 전대 의장의 사회권 조정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

기획조정국과 법률위원회는 전대 의장 사회권 문제에 대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안으로, 추후 당내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결론 유보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al. 070-4312-5665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